다산포럼

임현진

풀뿌리 사회운동을 주목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사회운동은 육·해·공군 중 '공군'에 비유된다. 비록 시민사회의 풀뿌리는 약하지만 사회변혁의 와중에서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점 폭격'을 잘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때로 정치 과잉의 사회운동으로 오해받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요긴한 자산임은 물론이다. 앞으로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성숙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생활정치에 기반한 풀뿌리 키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운동이 풀뿌리에 기반하여 생활정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주목된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했던 여성운동, 일본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운동, 시민정치교육과 정치참여를 주장한 한국YMCA 운동,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주민운동 등이 그 보기다. 이러한 풀뿌리 사회운동이 우리의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비록 아래로부터의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정치기회구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의식의 미숙, 정치교육의 부재, 정당정치의 취약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부정, 선심행정과 예산낭비 등으로 인하여 지역 수준에서 시민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생활정치 주체로서 나서기 어려운 것을 인정해야 한다. 중앙의 보수적 정당구조가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뻗쳐 독식하는 문제도 그 결과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주부와 여성이 제도정치로 점차 진출하였고, 생활협동조합단체들이 아이들의 보육이나 급식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역의 보육조례나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강화라는 측면에서 생활정치가 활성화되는 기폭제를 마련하였다.

풀뿌리 사회운동이 생활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단절시키기보다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반응하고 대안을 조직하여 공동체의 과제로 만들어 가는 매우 소중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는 급속히 확장된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의 물결 아래 WTO 체제, FTA 체결, 초국적 기업의 곡물시장 지배가 확고해지면서 이른바 세계식량생산소비 시스템에 완전히 노출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운동은 지역의 먹을거리 운동으로 운동의 수렴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시민단체, 생산자 및 소비자들도 먹을거리의 생산과 공급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교육, 건강, 소비, 생명, 환경, 지역자치, 식량주권 등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생활협동조합운동과 지역주민운동이다.

흥미롭게도 여성이면서 소비자인 전업주부, 농민, 교사, 노조원들이 지역의 자발적 소모임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나누고자 지속적인 토론과 학습을 통해 공통의 대안을 마련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소모임이야말로 한국형 생활정치를 모범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며, 나아가 지역의 이슈를 전(全)지구적인 문제와 결합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담론을 창출하는 풀뿌리 운동의 실체인 것이다.

지난날 민주화를 견인한 사회운동의 자리에서 주변에 머물었던 전업주부, 농민, 교사, 노조원 등은 높은 교육수준과 익숙한 정보화 기술을 토대로 풀뿌리 지역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건강과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후속세대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건강, 소비, 생명, 환경, 지역자치, 식량주권 부문을 상호 결합하는 일종의 풀뿌리 사회운동의 수렴을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근래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역조례 선포 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먹을거리와 식량주권을 가장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농업, 여성, 환경, 정의를 풀뿌리 사회운동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정보화시대를 맞아 이들은 풀뿌리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 정보화 활용능력(인터넷 카페, 트위터, 블로그 등)을 발휘하여 때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 속으로 내려가 이들을 지역, 중앙, 그리고 세계로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김상근

현실적 보육지원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을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임 연령층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저출산 문제는 이미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게 할 정도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방지를 위한 여러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부모들은 여전히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다는 쪽인 걸 보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의 지원 정책에는 아직 다가서지 못한 게 아닌 듯싶다.

저출산 예방의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탁상공론적인 보육 및 육아지원의 활성화 방안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보육에 관한 정책 기안자들의 보육에 대한 기본 인식의 변화가 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영유아 보육정책은 단순히 보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직장, 국가 등의 모든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보육을 단순히 '보육'이라는 단어에 사고를 한정시키지 말고 더욱 넓은 시야와 철학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보육정책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먼저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워주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말뿐이 아닌 국민이 느끼는 정책이어야 한다. 현재의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받는 액수보다 훨씬 큰 육아비용에 여전히 보육은 부모에게 큰 부담이다.

현재의 차등지원 방식을 전면 확대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 최소한 보육료만이라도 국가에서 전액 책임져야 한다.

물론 수반되는 소요예산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이 모든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외교안보, 녹색성장 등 정부 주도의 모든 사업이 나름 중요하지만 국민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숫자로 발표하는 정부 보육 지원보다 능동적인 보육지원정책 추진으로 아이사랑 플랜의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실현하여 공보육에서 진일보한 국가 책임보육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현대의 부모는 자신의 편안함이나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자녀에게 평생 헌신하는 종래의 전통적 양육개념의 변화로 역할의 갈등 및 상실 상황까지 놓여 가고 있다.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하고 그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시 보육정보센터장〉

기고

오주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교통안전도시 광주

최근 광주는 교통 후진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공직기관에서 먼저 팔을 걷었다.

민선 5기 강운태 시장 출범 직후 깨끗하고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음란성 광고물, 일명 '딱지'와의 전쟁 선포였다. 음란성 광고물과의 전쟁은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성과를 낳았다.

이후 광주를 선진교통 명품도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로 만들고자 교통사고줄이기 범시민다짐대회를 실시했다. 지난달 광주시에서 출발한 교통사고줄이기 범시민다짐대회는 지난 10일 서구청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오랜 기간을 걸쳐 공직사회부터 시작한 릴레이 행사는 지역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범시민운동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광주는 교통사고발생률 6년째 전국 1위, 음주와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율 전국 1위에 이어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10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도 230개 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여 객관적인 수치에서도 교통후진도시, 시민교통의식 최하위라는 오명을 안았다. 이러한 부끄러운 자화상은 바로 우리 모두가 만든 합작품이다. 그동안 무감각한 시민의 교통질서의식,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그리고 바르지 못한 보행문화가 낳은 결과물이다.

이제 우리 광주는 비엔날레, 김치축제 등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비롯하여 2015년 U대회까지 잇따른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호기를 맞고 있다.

또한 광산업을 기초로 수출 100억 불 달성도시로서 이미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변모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노인건강타운은 광주만의 자랑으로 성장하여 주변국의 이목을 끌고 있다.

광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에 걸맞게 교통문화에서도 선진화를 달성해 나가야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시작은 관이 주도했지만 이제 시민이 주도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과거 어려운 시기 때마다 우리 광주시민은 다른 어떤 지역민보다 정의롭고, 당찼다. 뿌리 깊은 민주시민의 정신을 되살려 우리 광주의 교통문화를 선진형으로 탈 바꾸어 후대에 빛고을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광주의 주요 기관을 비롯한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하여 광주선진교통문화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그 결과, 3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교통캠페인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교통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남아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안일한 교통의식에서 벗어나 나부터, 지금부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여야 한다. 지킬수록 편리한 교통문화를 바꾸는 일에 너와 내가 따로 없다.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교통문화를 바꾸는 일은 시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장〉

올바른 자전거 사용법 홍보로 사고 예방 줄여야

웰빙에 대한 관심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맞물리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듯 요즘은 대학가를 비롯한 학교 등지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홍보 노력에 비해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정립을 위한 정책적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까지 더해져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아이나 라이트 없이 밤길을 질주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기도 한다. 이런 실태 때문에 자전거 관련 사고는 해마다 소리 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줄이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바른 자전거 이용법 및 잘못된 자전거 이용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강화가 시급하다.

'자전거 이용자 증가'라는 아름다운 문구 뒤에 관련 사고율 증가라는 현실을 마주하지 않기를 바라며 녹색도시 광주에서 앞장서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립해주길 고대해 본다.

▲이꽃님·광주시 북구 일곡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설

지역 정치권 '예산 확보' 슬기롭게 대처해야

국회가 이번 주 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지만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광주시와 전남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가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이 3년 연속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국회 차원에서 확보한 지역 현안 예산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의 70%인 6조7000억 원을 비롯, 모두 11조30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4대 강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데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양측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가까스로 확보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의 사장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 추가로 확보한 예산의 대부분이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로 '없었던 일'이 됐던 게 단적인 예다. 현재 광주시가 예산 추가 확보나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야구장 건설비 등 20건에 1890억 원에 이르며, 전남도는 SOC(사회간접자본) 및 F1대회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5599억 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이들 예산이 누락된다면 현안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정치권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대치정국을 이유로 방치한다면 지난해와 같이 '닭 쫓던 개'의 꼴이 될 수 있다. 대립 속에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함께 같은 입장의 타지역 의원들과 공조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광주~순천 복선 전철화사업 늦출 이유 없다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의 복선전철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한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광주~순천 구간의 복선전철화가 2020년 이후 검토대상으로 밀려난 것이다. 말이 검토지 2020년 이후에나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의 다름 아니다.

광주~순천 간 복선전철화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제외된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우선 정부가 광역경제권 간에 KTX 고속철망을 구축하려는 계획과 정면 배치된다. 경전선은 광역경제권인 호남권과 동남권 간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철도망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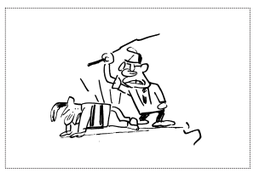
또한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광역경제권역 내 노선인 충남 천안~조치원 복선전철화는 2015년 이전 착수사업으로, 강원도 춘천~속초, 영남권의 김천~거제 복선전철화는 신설사업으로 2020년 이전 착수사업으로 각각 선정하면서 유독 호남권 구간만 배제했다. 특히 경전선의 영남권 구간인 삼랑진~순천 간은 2014년까지 복선전철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명백한 호남차별이라 할 수밖에 없다.

광주~순천 간 철도는 지난 1930년 개통이래 지금까지 단선으로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항과 광양항을 이용하는 광주지역의 철도이용 수출입 화물은 대전과 익산을 우회해 경부선이나 전라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광주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광주~순천 간 복선전철화 사업 연기를 당장 철회하고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광주시도 건의문이나 내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조기 착수를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回初理



요즘 하도 무슨 무슨 날이 많아 헷갈린다. 엊그제 11일은 어린이들에게 잘 알려진 '빼빼로 데이'이자, 우리 쌀 소비를 늘려 농민을 도와주자는 '가래떡 데이'였다.

그렇다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지난 2월 1일은 무슨 날? 처음 듣는 이도 있겠지만 '회초리(回初理)의 날'이었다.

한 전통문화 단체가 고안해 낸 회초리의 날에는 1년에 한 차례 '매맞는' 의식이 벌어졌다. 행사 참석자들은 부모님께 못다 한 효도를 뉘우치며 회초리를 맞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회초리의 날은 한자의 풀이대로 '돌아올 회(回)·처음 초(初)·다스릴 리(理)'의 뜻을 담아 인간 본연의 모습, 즉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질만 좇는 현대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예의범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행사 주최 측의 설명이다.

사실 회초리는 교육 현장에서 더 자주 등장했다. 서당에서 게으르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학동이 훈장에게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맞는 장면은 아주 익숙하다. 집안에서도 종종 부모들이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시키기 위해 회초리를 들곤 했다.

그러나 회초리로 상징되는 체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나 가정에서 따끔한 훈계가 사라졌다.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매를 때리거나 몸에 손을 대는 일은 때때로 법정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지난 1일부터 전면 체벌금지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매뉴얼은 모두 18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지만 일부는 실효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이 금지된 술, 담배를 접촉했나 알아보기 위해 음주 및 흡연측정기를 활용토록 했다. 치마를 짧게 줄인 학생에게는 옷감을 줘 늘리도록 한다는 발상은 쓴웃음이 나온다. 인권을 보장하면서 잘못을 깨닫게 하는 '현대적인 회초리'가 아쉽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